

[보도자료]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q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양 희 GM(젠더메인스트리밍)연구본부장

(연락처: 02-3156-7151, 이메일: kyh55@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 개발(III): 성 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발전사업,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 참여정부가 실시해온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인구의 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요구와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11.6%에 불과하고, 전국의 14개 광역지역혁신협의회의 여성비율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굵직굵직한 균형발전사업은 여성의 관점과 현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여성은 주로 마을 단위의 사업의 집행과정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평등한 지역일수록 혁신잠재력 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역별 여성전문직 종사자의 유입현황을 보면 61%가 수도권(서울 27.3%, 경기 33.7%)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로 나타났다. 이 두 지역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평등지수가 높은 곳으로, 성평등지수와 여성전문인력의 이동 사이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전문직 여성의 유입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혁신잠재력의 격차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내 여성의 혁신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여성들의 혁신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다시 그 지역으로 혁신역량이 있는 여성이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모델 모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비엔나와 뮌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친화적 지역발전정책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주택 단지 조성, 소녀들의 활동 성향을 고려한 공원 건설,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공간정책에 여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일본의 “여성이 빛나는 지역 활성화” 사례는 남녀공동참획국의 지원에 따라 지역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의 신활력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 사업에 여성과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1: 성 인지적 (gender sensitive) 지역혁신사업 개발· 실시
 - 과제1: 성 인지적 지역개발사업 아이템 공모
 - 과제2: 지역혁신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 과제3: 지역혁신사업의 선정·평가 기준에 성 인지적 지표 삽입
- 전략 2: 젠더 거버넌스 구축
 - 과제1: 지역혁신협의회 여성참여 확대
 - 과제2: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여성참여 증대
 - 과제3: 지역 여성전문가 DB 구축
- 전략3: 혁신주체들의 성 인지력 강화
 - 과제1: 혁신 교육에 성 인지 교육 통합
 - 과제2: 성 인지적 지역혁신발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 과제3: 여성혁신리더 양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